

2016. 5. 31 | 제 550 호 |

##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과 강원도

• 이원학(연구위원)

2016. 5. 31 | 제 550 호 |

##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과 강원도

• 이원학(연구위원)

최근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정책의 추진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어려워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2개 광업소)을 폐광한다고 하니 지역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12만 명이던 태백시 인구가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이후 4만 명 후반대로 감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마지막 경제적 보루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된 이후 국내 유일의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주도적으로 공급하여 한강의 기적과 산림녹화에 뚜렷하게 기여하였고, 이 중심에는 강원도 탄광지역이 있었다. 친환경·고효율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속에 석탄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시기의 문제이지 새로운 에너지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석탄산업 사양화의 논리 속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변화를 간절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폐광지역도 석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무엇인가를 찾고 키우는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이러한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첫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토종에너지 생산과 북한 및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보유한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일 것이다.
- 둘째, 지역에 정책추진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석탄산업 중심의 도시가 일순간에 몰락하면 국가적·지역적으로 석탄공사 부채보다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셋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를 지역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수익의 대부분이 정부로 귀속되니 지역에서 느끼는 기여는 생각보다 크지 못하다.
- 넷째,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통 접근성 확충, 교육·의료·상하수도 같은 기초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이 있어야 지역이 생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 I.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 에너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 경과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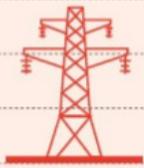
경과	주요 내용
2013. 1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실행계획 발표 : 획기적 부채감축, 자율적인 경영혁신, 범정부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
2014. 02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 계획 발표(한전, LH, 수공, 철도 및 철도시설). 단 석탄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주무부처와 경영정상화방안 TF 구성 추진)
2014. 05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 ICT R&D 관련 5개 기관의 업무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
2015. 01	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 고용·복지 One-stop서비스 구축, 훈련사업 심사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 역할 강화, 중소기업 R&D 기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
2015. 05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 SOC 32개, 농림·수산 16개, 문화·예술 39개 등 87개 기관 기능재편을 통해 핵심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경합 축소, 경영효율화 추진(52개 기관 업무 조정 및 4개 기관 폐지)
2015. 0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 2년간 6,700여 명 청년 고용 전망
2015. 06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 출연연 역할 강화, 정부 R&D 기획·관리·평가 혁신, 정부·민간 역할 차별화, R&D 거버넌스 개편(9월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2016. 0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 :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
2016. 상반기	<b>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이 진행 중</b>
2016. 하반기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분야 기능조정이 진행될 예정

⇒ 폐광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6월 경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주요 이슈

-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능조정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기능조정방안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보도해명자료 참고)

※ 한국경제, 조선비즈, 서울신문 등 다양한 언론에서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우려 제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공사탄광3곳 폐광 후 폐업 검토		대한석탄공사폐업
에너지공기업 합병 후 민간이관		저소득층 연탄 수요 감안해 신중해야
경영투명성 위해 지분 일부상장 필요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폐지, 홍보업무는 산업부가 맡아야		발전지회사 상장
일원화 필요 (현재 발전용댐은 수력원자력, 일반댐은 수자원공사)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발전용댐 일반댐 관리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 자료(2016. 5. 16)

- 정부는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
  - 석탄공사 정리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음
    -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려우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어야 함
    - \*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석탄공사 부채, 폐광시 폐광대책비 등 대규모 재정 조달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나, 중기재정계획상의 '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 수급상황 감안시, '17년 화순탄광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 및 석탄공사 부채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음
  - 해외자원개발부도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 또한, 한전 가정용 전력판매 시장의 전면 민간 개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발전사 상장, 댐관리 일원화,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 가스도입 민간개방 확대 등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I. 강원도내 에너지공공기관 현황과 주요 이슈

### ■ 대한석탄공사 : '03년 9천억 원 규모 부채가 '15년 1조 6천억 원 규모로 증가

- 본사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강원도 태백 및 삼척, 전남 화순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 〈석탄공사 생산량 및 종업원 수〉

	생산량(톤)	종업원 수(명)
태백 장성	473,000	943
삼척 도계	320,000	573
전남 화순	228,000	442
원주 본사		105
	1,021,000	2,063

- 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되어 1990년대까지 국가에너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연료로서 국내 무연탄은 아직도 연간 163만 톤이 사용되고, 12만 가구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강원도의 경우 2014년 기준 국가 생산량의 87.3%를 차지하고, 석탄공사의 경우 국가 생산량의 5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공사의 폐쇄는 지역 산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의 변화〉

	1981	1986	1988	1991	1996	2001	2006	2011	2014
총생산량(천톤)	19,865	24,253	24,295	15,058	4,951	3,817	2,824	2,084	1,748
강원도 생산량(천톤)	14,151	18,019	17,822	10,875	4,317	3,297	2,480	1,856	1,526
강원도 생산비율(%)	71.2	74.3	73.4	72.2	87.2	86.4	87.8	89.1	87.3
석탄공사 생산량(천톤)	4,883	5,218	5,221	3,845	1,777	1,326	1,290	1,076	1,022
석탄공사 생산비율(%)	24.6	21.5	21.5	25.5	35.9	34.7	45.7	51.6	58.5

- 대한석탄공사가 단계적으로 정리될 경우, 탄광지역은 물론 혁신도시가 위치한 원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전남 화순탄광, 2019년 태백 장성탄광, 2021년 삼척 도계탄광에 대해 석탄수요를 감안해 점진적 폐광 검토
  - 석탄공사 직접고용 약 2,000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4,000여 명, 지역의 기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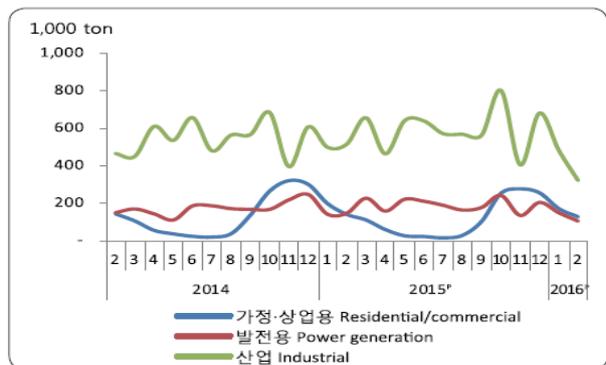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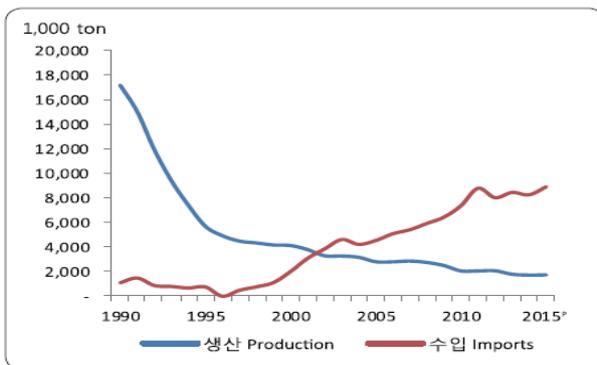
## ■ 한국광물자원공사 : '15년 부채비율 6,905%로 증가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광물자원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67년 설립되었음
  - 주요 업무는 국내외 자원개발과 자원정보 제공, 광산조사 및 탐광시추, 광업 자금 융자 및 광산물개발 지원, 심해저 자원개발 등
  - 공사는 17개국 32개(생산 13, 개발 8, 탐사 11)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36억 달러('14년말 기준)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금액 163억 달러의 22%를 차지
- 공사는 국내 및 해외사무소를 포함하여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3년 기준 자산 52,206억 원, 부채 35,235억 원인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2015년 2조 6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6,905%라고 발표되었음
-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딜로이트 안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을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관하는 등 핵심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원개발 사업은 위험성이 높고 불안감도 크지만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공기업의 역량이 국내 민간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기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본과 중국 같은 국가는 오히려 저유가 시대에 자원개발에 더 투자를 집중하는 사례를 볼 때,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과 축적된 역량을 집중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고 있음

### Ⅲ. 국가에너지 정책방향과 지역의 여건

#### ■ 국가에너지 정책방향

- 2014년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가 조사한 에너지안보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9개국 중 98위로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소비량은 282,938천TOE이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61TOE(30년간 약 4배 증가)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는 95.2%(우라늄 제외시 83.5%)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
  
- 2014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은 1,741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입액 5,255억 달러의 33.1%로 매우 높은 수준
  - 이는 수출 상위 3개 품목(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의 수출액 1,628억 달러 보다도 높은 수준임. 추가적으로 금속광물의 수입액은 194억 달러로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무연탄의 경우 연간 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10,656천 톤임. 현재 1,764천 톤을 생산하고, 8,938천 톤을 수입하여 가정·상업, 발전,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14년 가격기준(103달러/톤)을 적용했을 때 약 9억 달러로 약 1조 원 정도가 수입을 위해 지출되고 있음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무연탄 공급 및 소비 현황>

- 취약한 에너지안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서는 경제성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경제성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기능조정보다는 국가에너지안보, 저소득층 안정적 연료 공급, 지역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긴 호흡을 갖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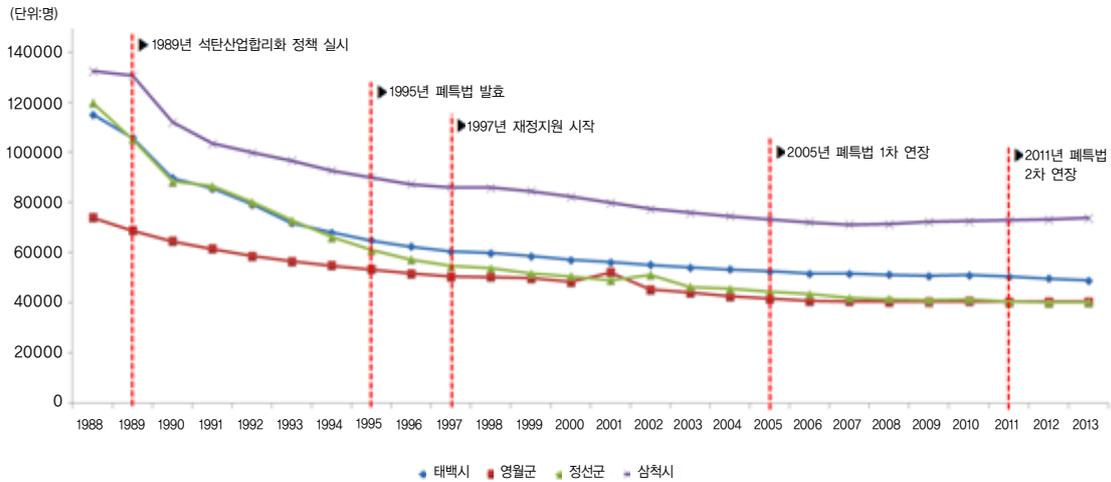


자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자원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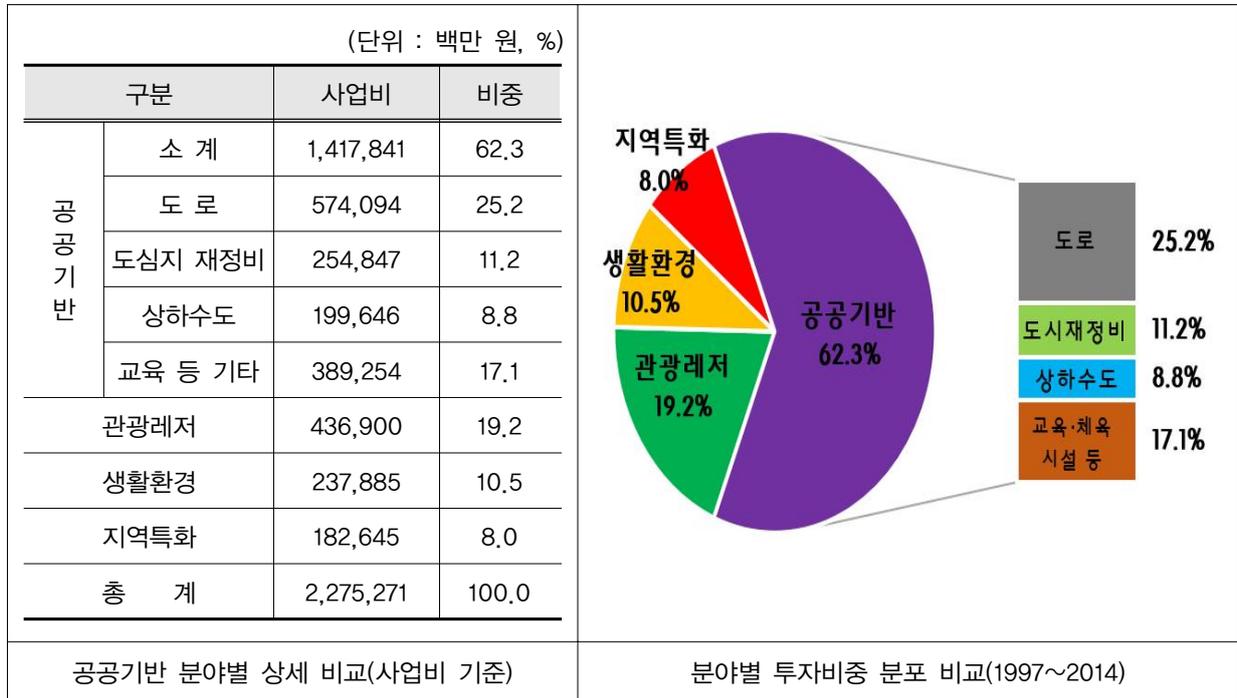
## ■ 탄광지역의 현황과 실태

- 탄광지역 4개 시군(삼척, 태백, 영월, 정선)의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 이전인 '89년 41만 명에서 '13년 2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
  - 정부의 급격한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과 지역의 대체산업 확보 미비로 인한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됨
  - 탄광지역의 석탄공사 광업소 폐쇄는 다시 한 번 지역의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탄광지역의 인구 변화〉

- 지역적으로도 폐특법 제정 이후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공공기반 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대체산업 발굴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
  - 공공기반 및 생활환경에 70%,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레저기반 조성에는 30% 정도의 재원만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 이들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KDI(2012년)의 낙후도 조사 결과를 보면 170개 시군 중 삼척 128위, 태백 85위, 영월 120위, 정선 109위로 아직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임
  
- 폐광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공공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대부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폐광지역에 한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투자로 판단될 수 있음
  
- 태백시의 경우(2012년 기준) 광업의 부가가치가 754억 원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315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급격한 석탄산업의 퇴출은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 : 탄광지역 투자내용(1997~2014년) 현황

### 〈폐특법 이후 재정 투자 현황〉

- 국내의 에너지·광물 자원 환경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안보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이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아직도 많은 저소득층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무연탄의 공급 축소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대 보급 정책과 연계하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석탄산업의 급격한 퇴출보다는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과 연계하여 긴 호흡으로 정책을 다듬는 것이 보다 긴요한 방향일 수 있음
- 정부와 지역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이 우선 과제일 것임

## IV.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강원도의 방향

### ■ 국가 에너지·광물 자원의 안보 차원에서 관련 기술과 인력의 지속적 유지 필요

- 공기, 물, 식량 등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가장 필수적인 생존자원임.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 다양한 외부요인이 작용하는 에너지·광물자원 시장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안보 정책에서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음. 따라서 일정 부분의 영역에 대한 기능조정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유일한 토종에너지인 석탄의 60% 정도를 생산하는 석탄공사의 퇴출은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향후 남북교류 협력의 확대시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산 유지를 통한 기술과 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요구됨
  - ※ 2014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지하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이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러한 정책과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 ※ 2015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4개 분야 선정)에 광물 자원개발을 신규로 선정<sup>1)</sup>하여 핵심기술을 6년간(2015~2021년) 개발할 예정임
  -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으로 5개(서울대, 한양대, 인하대, 전남대, 강원대)를 선정하여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음
  - ※ 현재에도 석탄을 친환경·고효율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 추진 중에 있음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으로 “한반도 융합형 광물자원 기술개발” 사업을 선정하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할 계획임. 주요 내용은 한반도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맞춤형 탐사, 선광, 제련 등 소재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 가치 인정과 긴 안목으로의 정책 추진 필요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8,206천 가구 중에서 121천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음. 여기에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연탄 사용을 포함하면 사용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연탄사용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대체 에너지 공급 여건을 마련한 이후에 연탄 사용가구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역의 노력이 중요

- 석탄산업 이후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임. 친환경에너지, 미래 첨단에너지의 대두로 석탄은 언젠가는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동의하고 있음
-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 이후 지역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체산업 육성 등이 부족한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폐특법 이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이 강원도 및 폐광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논의에 정부를 포함하여 지역주민까지 적극 참여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요구됨
- 지금까지의 폐광지역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재원투자 방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 특히 그간 조성된 수많은 시설들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콘텐츠 발굴 등이 필요할 것임
-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강원랜드가 납부한 세금 및 기금은 3,961억 원이고, 이 중 68.5%가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조사됨
- 2025년 폐특법 종료 이후에도 강원랜드가 지역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등 육성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임

### ■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역량 강화

- 강원도 관광지역은 국내에서 접근 교통여건이 가장 낙후된 지역임. 따라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제천-삼척간 고속도로”의 조기추진을 통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현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는 완공된 상태임)
- 관광지역은 석탄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수질·토양, 폐석산 등)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선제적 해결이 고원관광도시로 지역이 성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임
- 지역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보다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지역의 발전은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폐특법 이후 20년의 교훈일 것임

-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석탄의 생산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이제는 석탄공사 퇴출이라는 하나의 문제보다는 관광지역 전체의 발전방향과 석탄산업의 가치, 강원랜드의 지역적 역할, 폐광지역의 환경개선, 지역의 여건(교통, 의료, 교육 등)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 정부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석탄공사 폐쇄를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보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등을 함께 놓고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관련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컨센서스를 구성할 것을 요구함